지방대 지원 권한 지자체로… 교육계 "정부 책임 덜기" 지적

교육부, 지방대 권한 지자체 이양
선거직 지자체장 관리·감독 우려
2025년까지 견제 장치 등 방안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 당국이 지방대학의 재정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 교육계에서는 지자체장이 선거직인 만큼 재정 관리·지원에 대한 공정성을 우려하며 '정부의 책임 방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9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8일 이뤄진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여당과 정부는 2025년까지 교육부의 지방대 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넘긴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를 2025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당국은 이번 재정 권한 이양을 통해 지자체와 지방대가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이에 맞춰 대학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현장 안팎에서는 지방대 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문제에 대해 우려가 컸던 만큼 향후 더욱 여론의 향배가 주목된다. 지자체는 선거직인 만큼 공정성 있는 운영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대학교육연구소는 '정부 책임 방기하는 '지방대 권한 지자체 위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고한 바 있다.

임은희 대교연 연구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립대학 운영자들은 일종의 권력자"라고 일갈했다. 지자체장은 4년마다 선거를 하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 바뀔 여지라도 있지만 사립대학 운영자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다. 지역 내 관계나 영향력에 구애받지 않고 공정한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임 연구원은 "이번 정책에서 발표한 내용이 지방대학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에 초점을 뒀는데 사실상 예산을 정리해 보면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격차를 완화시키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며 "정부가 지자체를 이용해 의도한 만큼의 지방대학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자체에 그럴 만한 권한이나 역량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또, 지자체장이 선거직이기 때문에 떻게 잘 지원하냐보다는 어떻게 평화로 연결되냐의 관점도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산학협력과 재정적인 협력 지원에 한해서지 모든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역시 부실 운영 대학의 지역 떠넘기기로 귀결될 우려를 제기했다. 연맹은 논평을 통해 "지방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선행돼야 할 것은 수도권에 집중된 학벌 문화와 입시정책의 변화"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사회, 경제, 문화, 교육적 양극화 현상, 학령기의 절대적 인구 감소 등의 총체적인 사회 문제를 시장경제에만 맡기다가 교육부가 다 떠안는 형국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교육계의 우려에도 정부와 여당은 지방대학 재정 지원 권한 지자체 이양을 골자로 한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 추진에 돌입했다. 더불어 교육부가 대학들의 규제 완화를 예고한 만큼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가 권한을 맡게 될 경우 관리·감독의 실효성이 의심될 수 있기 때문에 뚜렷한 운영체계 설치가 요구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선정 과정에서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전담기구가 맡게 될 것"이라며 "해당 기구를 만들고 입안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시범 지자체 5개를 선정해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2025년까지 견제할 장치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가정통신문, 교육청서 학부모에 직접 보낸다

서울시교육청, 학교 업무부담 최소화
연간 사업사전 일괄 안내제 시범운영

앞으로는 가정통신문 발송 방법을 개선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직접 학부모에게 전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각종 안내사항을 학부모에게 보다 빠르게 전달하고, 학교 업무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 발송방법을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디지털 사회 환경에 따라 서울 소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알림서비스(App)를 활용해 안내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시대 흐름과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적극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개선은 학부모에게 공통 안내가능한 가정통신문을 교육청이 일괄 안내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학교 전달사항에 대해 본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공문을 시행하면, 각 학교에서는 내부결재 후 각각 홈페이지와 알리미앱에 등록해 왔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이 과정이 감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공문서 감축 정책 추진하면서 부서간 업무 협력을 통해 학교 공통·반복 업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지난해 1월부터 교원연구비의 교육청 일괄 납부를 시작으로, 올해 3월부터는 스쿨넷(인터넷) 통신요금을 교육청에서 일괄 집행하는 것으로 개선해 학교 업무 경감 및 효율화를 추진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학교 공문서 감축 방안으로 학교 관련 외부 기관 간 협력을 확대해 2023년부터 '자치구의 학교 관련 연간 사업 사전 일괄 안내제'를 시범 운영한다.

이러한 서울시교육청 학교 공문서 감축 정책에 대한 2022년 연말 교직원 설문조사 결과, 정책 만족도는 70.5%(전년대비 3.6% 증가), 학교 공문서 감축 정책 확대 의견은 96.1%(전년대비 2.7% 증가)로 긍정적인 인식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가정통신문 교육청 일괄 발송 등 학교 업무경감 효과는 서울의 전체 학교는 물론 전국 시·도교육청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공문서 감축 방안 등 학교 업무 경감 및 효율화를 위한 정책 추진으로 선생님이 학생들의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서울과기대-경상국립대-연암공대-인천대 LINC 3.0 사업단이 업무협약식에서 박근 서울과기대 LINC 3.0 사업단 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과기대

서울과기대, AI·로봇 네트워크 협업 MOU

경상국립대-연암공대-인천대 협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단이 지난 5일 서울 공릉동 교내 테크노큐브동 큐브홀에서 'AI·로봇 공유·협업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에는 서울과기대를 비롯해 경상국립대, 연암공대, 인천대가 함께했으며, 이후 권역 및 대학 간 AI·로봇 협의체를 조성해 업무교류 및 산학협력 활성화, 공동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LINC 3.0 사업의 ▲수요맞춤 성장형 ▲협력기반 구축형 ▲기술혁신 선도형 간 주요 인프라를 공유하고, 업무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미래 인재 양성과 특화 분야 및 신산업 혁신 선도에 기여할 예정이다.

/신하은 기자

'늘봄학교' 시범운영… 2026년 전국 확대

교육부, 4개 시·도 200개교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돌봄과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4개 시·도 200개교에서 시범 운영한다.

교육부는 9일 초등학생 방과 후 활동 지원을 통해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정부세종청사에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늘봄학교는 방과 후 교육활동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제고해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출발점 시기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에게 개별화된 교육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늘봄학교 추진을 통해 2025년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해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Educare)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저학년의 경우, 단순 돌봄에서 벗어나 기초학력 지원,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오후 돌봄뿐 아니라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돌봄·저녁돌봄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입학 초 조기 하교로 인한 돌봄공백을 해소하고자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 시범 운영하며, 고학년에게는 인공지능(AI)·코딩·빅데이터, 소규모·수준별 강좌 등 고품질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틈새돌봄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3년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늘봄학교 모델을 개발해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양질의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을 위해서는 3월 초 또는 최대 1학기 동안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놀이·체험 중심의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돌봄서비스를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아침돌봄·저녁돌봄 등 다양한 유형의 틈새돌봄을 강화한다. 수요에 따라서는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저녁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하은 기자

구미대, 12년간 평균 취업률 '전국 1위'

1년간 유지취업률 82.1%

구미대학교가 2010년부터 평균 취업률에서 12년간 전국 1위(졸업생 1000명 이상)를 지키고 있다.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6일 발표된 전국 전문대 취업률에서 구미대는 77.4%(졸업생 1989명)를 기록해 졸업생 2000명 내외 규모의 전국 전문대에서 비수도권 1위를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공시된 전국 전문대 평균 취업률은 71.3%이다.

이로써 교육부가 건강보험DB를 기준으로 취업률을 발표한 2010년부터 최근까지 구미대는 12년간 평균 취업률 80.5%를 기록했다. 이는 특수목적, 기능 대학 등 졸업생 1000명 이하 규모를 제외한 전문대에서 전국 취업률 1위의 기록이며, 평균 취업률이 80%가 넘는 대학도 구미대가 유일하다. 즉, 졸업생 10명 중 8명 이상이 꾸준히 취업에 성공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취업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인 1년간 유지취업률에서도 구미대는 82.1%를 기록해 졸업생 2000명 내외의 전국 전문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은 74.8%이다.

/신하은 기자